



국제사회 공조 '투-트랩' 불가피

(당근-채찍 병행)

■ 대북·안보정책 바뀌나

북한의 핵 실험 강행 사태를 맞아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과 전시 작전통제권 조정 등 전반적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게 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경 입장을 돌아섰다는 점도 대북 정책 변화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도 대북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참여 정부가 당장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대북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 이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당분간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조정 및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10일 국회 통일외무위에 출석,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非核원칙 깨져 '무조건 끌어안기' 한계 포용정책 기본틀 유지속 부분적 조정

다른 향후 대북정책 수정 가능성과 관련, "평화변영 정책 전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북 포용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및 내용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과연 전작권 문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꼼꼼히 쟁거해보겠다"고 말해 전작권 환수의 시기나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국방부도 전작권 환수 협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시기가 유동적이라고 밝히 이런 관측은 더욱 더 설득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작권 환수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빌려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대북 및 안보정책은 조건 없는 북한 끌어안기보다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 속에 당근과 채찍을 조율하는 투-트랙 접근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채찍으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북한 인권문제 적극 제기, 미·일의 미사일 방어체계 동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당근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고 결과에 따라 경제 협력 및 제재 완화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참여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며 "이번 북 핵 실험 사태로 대북 포용정책은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 정책도 일정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에 온 DJ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햇볕정책의 산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 영접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전남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사진기자 mjna@kwangju.co.kr

■ 전직 대통령 北 핵실험 진단 3인3색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낮 전두환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한 핵실험 사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은 2004년 1월13일 신년 모임 이후 2년반여만의 일이다.

회동에선 특히 퇴임 후에도 정치적 라이벌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YS와 DJ가 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해 이목을 끌었다. 2004년 1월 당시 모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YS "햇볕정책 폐기를" DJ "북-미 대화 우선" 노 "작통권 환수 유보"

노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전직 국가원수들로부터 국가운영의 경험과 고견을 듣는 자리였다. 대북 강경론자인 YS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YS는 우선 북한 핵실험을 "6·25 이후 우리나라에서 겪은 가장 큰 일"이라고 규정, "나라가 이 지경이 돼 정말 국민이 불쌍하고, 분해 잠을 자지 못했다"며 햇볕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하고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YS는 이어 "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엄청난 사안"이라며 DJ와 노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퇴를 요구하면서 두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북핵은 두 정권이 8년7개월 동안 4조5천800억원의 돈을 북한에 퍼줘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감싸기만 한 노 대통령은 북한의 변호사인"이라며 핵무기가 자위수단이란 북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던 노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YS가 이처럼 바로 면전에 대고 '직격탄'을 날렸지만 DJ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DJ는 대신 발언 기회를 얻자 보수층의 햇볕정책 인과론을 겨냥, "북미관계가 안돼서 북핵문제가"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교동의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DJ는 "금번 북한 핵실험은 절

대로 응답할 수 없다. (북핵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북미 대화와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사대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 같은 군사적 징벌과 경제적 제재, 대화를 통한 해결인데, 전쟁은 미국부터가 그럴 여유가 없고, 경제적 제재는 되레 북한의 도발과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제재에 앞장설 필요가 없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DJ가 내놓은 해법의 핵심이었다.

DJ는 이 같은 발언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한 듯 자료가 담긴 듯한 두툼한 봉투를 오찬장에 들고 나왔고, 최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오찬에서 한 언급 요지를 보도자료로 내도록했다.

이는 YS가 오찬 후 상동동 자택으로 한나라당 출입기자들을 불러 오찬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거침없이 소개한 것과는 대비됐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 불균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전작권 환수 문제도 상황이 악화되면 이상 상황기간 유보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군 출신답게 군사적 시각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에게는 "각정이 많으셨겠다"며 위로의 뜻도 전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없이 주로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을 경청했고,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대북 결의안 불발 北핵실험 대응 입장차

우리 "포용정책 무조건 폐기 안된다" 한나라, 지원 중단·내각 총사퇴 요구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당초 북한 핵 실험 관련,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상황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의 반면, 한나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결의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했고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 현안질의만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정부 대

응을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긴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 재검토와 대북 지원 중단,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쪽짜리 보고서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송구스럽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대책 위원 회의에서 김근태 의장은 "북한 핵 사태는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담보나 확신도 없다"면서

"위기를 증폭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사이에 정쟁을 자제할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모한 도발이고 엄숙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 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과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대북수해 물자 지원 등 모든 대북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내년도 예산에서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기차여행 (무박 3일)
여행상품: 부산, 서울, 제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문의: 062-525-6630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양입하
MAESTRO, DAKS, JONGGUNG, INGI, JAFUMA, DAK COUP
상설할인마트 서삼점
062-511-0249